

2002년 복지서비스부문 예산분석 및 개선방안

Social Welfare Services and Budget Allocation 2002

1. 서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다양화되고 기능은 축소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출산력의 감소로 연소인구의 감소와 함께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구성비는 1960년 2.9%였으나 2000년에는 7.2%, 2020년에는 15.1%로 증가하여 본격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 39.0%가 일상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소인구층의 감소로 가정내 부양자녀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맞벌이가구의 증가,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증가로 인하여 자녀부양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확대받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출아동, 유기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의 증가, 가정해체, 아동학대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卞 榕 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2002년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고찰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2002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예산 현황

2002년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예산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예산은 1조 33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0.9%나 증가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 3.9%에 비해 약 5배 이상이나 높은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02년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예산은
1조 33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0.9%나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율 3.9%에 비해
약 5배 이상이나 높다.

표 1.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¹⁾ (A)	2002예산 (B)	증 감 (B-A)
합 계	7,458,139	7,749,477	291,338(3.9)
- 인 건 비	108,013	125,265	17,252(16.0)
- 사 업 비	7,350,126	7,624,212	274,086(3.7)
• 사회복지	4,124,329	4,436,549	312,220(7.6)
기초생활보장	3,269,589	3,403,369	133,780(4.1)
사회복지서비스	854,740	1,033,180	178,440(20.9)
• 보건의료	317,322	358,888	41,566(13.1)
• 사회복지	2,908,475	2,828,775	△79,700(△2.7)

주: 1) 2001년 예산은 추경예산기준(1조 1854억원 포함) 금액이며, 2001년 본예산(추경전 6조 2727억원) 대비 증가율은 23.5%임.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2002년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장애인복지로서 26.5%이며, 다음이 노인복지로서 2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육사업의 증가율도 23.3%로 높았다. 한편, 여성복지의 경우 여성부의 신설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업이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29.6%나 예산이 감소하였다.

예산의 규모별로는 노인복지 예산이 378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3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장애인복지로서 2002년도 전체 예산은 2327억원으로서 2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보육사업으로서 2103억원이며, 아동복지 예산은 771억원이었다. 한편, 여성복지분야의 예산 규모는 180억원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중 그 비중이 1.7%에 불과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2년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854,740	1,033,180(100.0)	178,440(20.9)
노 인 복 지	299,722	378,726(36.7)	79,004(26.4)
장 애 인 복 지	183,861	232,667(22.5)	48,806(26.5)
보 육 사 업	170,563	210,280(20.4)	39,717(23.3)
아 동 복 지	73,675	77,086(7.5)	3,411(4.6)
여 성 복 지	25,596	18,027(1.7)	△7,569(△29.6)
기 타	101,323	116,394(11.3)	15,071(14.9)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1) 노인복지 예산

노인복지 예산은 2001년의 2997억원에서 26.4%가 증가한 3787억원이다. 이 가운데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이 65.0%나 되는 2460억원이며, 전년의 1999억원에 비해 461억원이 증가하였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30만 8천명과 저소득 노인 49만 2천명 등 모두 8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그 수준도 전년에 비해 5천원을 상향조정하여 지급수준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결식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매일 3만 4천명에게 식

사를 제공(76.7억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결식 재가노인 1만 7천명에게는 매일 점심배달서비스를 제공(49.6억원)하기 위하여 126억원이 배정되었다.

2002년 현재 전체 노인의 약 8.3%로 추정되는 치매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20개소를 추가로 설립하여 모두 31개소를 확보하며, 노인치매요양병원도 현재 5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하는 데 모두 3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에 산재해 있는 28,580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생활과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현재의 166개소에서 226개소로 확충하여 지역사회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 예산은
2001년의 2997억원에서
26.4%가 증가한
3787억원으로 이 가운데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이 65.0%나 되는
2460억원이다.

표 3. 노인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299,722	378,726	79,004 (26.4)
- 노인시설보호	68,198	96,712	28,514 (41.8)
- 재가노인지원	231,351	281,856	50,505 (21.8)
• 경로당지원	11,118	11,118	-
• 활성화사업	440	440	-
• 경로연금	199,867	246,000	46,133 (23.1)
• 재가복지사업	4,561	6,081	1,520 (33.3)
• 노인건강진단	277	277	-
• 경로식당 무료급식	7,672	7,672	-
• 결식재가노인식사배달	4,959	4,959	-
•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110	117	7(6.4)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07	607	-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	1,245	1,245(신규)
• 대한노인복지회관 신축	-	1,500	1,500(신규)
• 민간단체지원	1,440	1,540	100(6.9)
• 연구개발비	300	300	-
- 행정지원	173	158	△15(△8.7)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172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20개소의 운영비로 12억 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2) 장애인복지 예산

2002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모두 2327억원으로서 전년의 1839억원에 비하여 26.5%가 증가하였다. 예산 내역중 상대적으로 증가를 많이 한 부문은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저소득 장애인 지원부문으로서 모두 155억원이 증가하였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 장애등급 1~2급 및 정신지체 3급 중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이러한 장애수당을 9만 2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월 4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수당 예산은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지원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대상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 2,089명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신규로 월 4만 5천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 11만 9천명에게 외래인 경우 1차 진료기관인 경우 50%, 2·3차 진료기관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입원하였을 경우 전액 지원하는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2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저소득 1~3급의 장애인 중고생 자녀 및 장애인 중고생에게 교육비를 36억원 지원하며, 저소득가정 등의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10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1인당 2000만원의 지원을 위해 신규로 6억원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차량 30만대에 대하여 월 2만 1천원을 LPG 세금 인상분으로 지원(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하기 위하여 모두 721억원이 배정되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예산은 전년에 비해 105억원이 증가한 926억원이며,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예방 및 등록사업의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전년대비 78억원이 증가하여 10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 예상되는 등록장애인수는 전년의 115만 6천명에 비해 15만 9천명이 증가한 131만 5천명이며, 기존 장애 범주에서 14만 2천명, 그리고 2차 장애 범주확대로 인하여 1만 7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장애인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183,861	232,667	48,806(26.5)
-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82,035	92,553	10,518(12.8)
- 치과유니트 지원	-	120	120(신규)
- 직업재활시설 지원	9,857	13,516	3,659(37.1)
- 저소득장애인 지원	45,238	60,736	15,498(34.3)
• 장애수당	33,125	44,780	11,655(35.2)
• 장애아동부양수당	-	751	751(신규)
• 장애인의료비	8,181	10,227	2,046(25.0)
• 장애인 자녀교육비	3,475	3,643	168(4.8)
• 청각장애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600	600(신규)
• 재활보조 기구교부	457	735	278(60.8)
-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33,606	43,940	10,334(30.8)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733	21,342	1,609(8.2)
• 재가복지 봉사센터	1,840	1,895	55(2.9)
• 주간보호시설	657	1,034	377(57.2)
• 단기보호시설	164	259	95(57.9)
• 공동생활가정	400	630	230(57.5)
• 장애인재활의료시설	1,442	1,587	145(10.1)
• 장애인체육관	289	303	14(4.8)
•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6,659	9,484	2,825(42.4)
•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	5,000	5,000(신규)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494	1,448	△46(△3.1)
• 수화통역센터	519	545	26(5.0)
•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210	216	6(2.9)
• 장애인 정보화지원	199	199	-(-)
- 장애등록 및 장애 예방	7,740	15,577	7,837(101.3)
- 시각장애인 재활 지원	-	300	300(신규)
- 행정 지원	145	147	2(1.4)
- 국립재활원 전출금	5,240	5,777	537(10.2)
- 자립자금융자(채특)	(16,000)	(14,000)	(△2,000)(△12.5)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	<26,900>	<72,149>	<45,249>(168.2)

주: < >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그 외에도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재가장애인복지봉사센터, 장애인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 장애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각장애 인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보육사업 예산

보육사업 예산은 모두 2103억원으로서 전년의 1706억원에 비해 23.3%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 항목은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사업으로, 전년의 63억원에서 485억원으로 6.8배나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의 대상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에서 전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5. 보육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170,563	210,280	39,717(23.3)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97,878	105,164	7,286(7.4)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60,000	48,966	△11,034(△18.4)
-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	6,254	48,480	42,226(675.2)
-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3,363	3,445	82(2.4)
-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569	569	-
- 보육정보센터 운영	330	330	-
- 보육시설 기능보강	1,220	2,070	850(69.7)
- 어린이집운영	546	878	332(60.8)
- 민간단체지원	167	167	-
- 행정지원	236	211	△25(△10.6)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보육사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서 모두 15,370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5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의 확대에 인하여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만 5세아가 빠져나감에 따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의 600억원에 비해 110억원이

감소한 490억원이다. 이를 보육료가 전액 면제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 2만 8천명과 보육료의 40%가 면제되는 저소득층 자녀 7만 8천명 등 모두 10만 6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4) 아동복지 예산

아동복지 예산은 전년의 737억원에서 4.6% 증가한 771억원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에 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낮은 실정이다. 아동복지예산은 모두 34억원이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아동의 시설 보호에 58억원이 추가 투입되어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27억원이 삭감되었다.

보육사업 예산은 모두 2103억원으로서 전년의 1706억원에 비해 23.3%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항목은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사업으로, 6.8배나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6. 아동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73,675	77,086	3,411(4.6)
- 아동시설 보호	51,917	57,742	5,825(11.2)
- 아동건전 육성	21,758	19,344	△2,414(△11.1)
• 결연기관 운영	1,321	1,361	40(3.0)
• 입양기관운영	123	129	6(4.9)
• 소년소녀가정 지원	9,680	9,714	34(0.4)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91	204	113(124.2)
• 그룹홈 보호	187	196	9(4.8)
• 퇴소아동정착금	550	600	50(9.1)
•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	58	161	103(177.6)
• 자립지원센터	119	123	4(3.4)
• 결식아동 급식지원	8,602	5,939	△2,663(△31.0)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975	809	△166(△17.0)
• 어린이날행사	18	18	-
• 입양정보센터운영지원	16	16	-
• 행정지원	18	74	56(311.0)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17개소 운영비로서 8억원, 소년소녀 가정 11,390명에 대한 지원과 4,600명의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으로 97억원이 배정되었다.

5) 여성복지 예산

여성복지부문의 예산은 180억원으로서 전년의 256억원에 비해 29.6%가 감소된 것이다. 이는 여성부의 신설로 선도보호시설 운영,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시설 운영, 1366상담소 운영 및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예산 등 72억원이 여성부로 이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고생자녀 학비지원이 전년의 2만 4천명, 123억원에서 2만명 113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는 2002년 중학교 신입생(4천명)부터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7. 여성복지 및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25,596	18,027	△7,569(△ 29.6)
- 모자복지시설	9,351	6,545	△2,806(△ 30.0)
-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2,275	11,293	△982(△ 8.0)
- 성폭력방지	1,539	-	△1,539(△100.0)
- 가정폭력방지	777	-	△777(△100.0)
- 1366상담소 운영 지원	359	-	△359(△100.0)
-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1,004	-	△1,004(△100.0)
- 여성단체지원	228	131	△97(△ 42.5)
- 국제부담금	6	7	1(16.7)
- 행정지원	57	51	△6(△ 10.5)
- 모·부자가정 용자(재특)	(4,000)	(2,700)	(△1,300)(△ 32.5)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6)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은 1164억원으로서 전년의 1013억원에 비해 14.9%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관이 27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전년의 223개소에서 237개소로 확대되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년의 5,500명에서 7,200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 606억원이 확보되었다.

여성복지부문의 예산은 180억원으로서 전년의 256억원에 비해 29.6%가 감소되었으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은 1164억원으로서 전년의 1013억원에 비해 14.9% 증가하였다.

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예산 평가

2002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은 1조 332억원으로서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였고, 전년대비 20.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게 아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표 8.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예산¹⁾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1예산 (A)	2002예산 (B)	증 감 (B-A)
계	101,323	116,394	15,071(14.9)
- 부랑인시설	13,467	14,456	989(7.3)
- 사회복지관 운영	7,630	8,570	940(12.3)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68	4,545	477(11.7)
- 재가복지봉사 센터운영	6,808	7,601	793(11.6)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3,708	60,579	16,871(38.6)
-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	2,701	2,701	-
- 사회안전망 구축	-	200	200(신규)
- 사회복지시설 평가	150	150	-
- 사회복지사관리	345	345	-
- 가정의례지원	19,189	14,880	△4,309(△22.5)
- 가정복지운영	118	115	△3(△ 2.5)

주: 1) 예산이 적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였으므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

구나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를 전년에 비해 1,700명이나 증가한 7,200명 수준으로 확보한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의의 있는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산 투입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주로 현금지원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지급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수급자의 범위나 지원수준이 미흡한 관계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균생활비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도시저소득층 가구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환경 및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단순 보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규모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내실화를 통해 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유병장수 노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내 부양기능은 약화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최근 많이 확충되고는 있으나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입원과 같은 고비용 복지체계보다는 효율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및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의료재활서비스나 전문병원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단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 규모 자체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 복지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정부예산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4. 결 론

21세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으로써 소외당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즉, 복지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정부, 지역사회, 가족, 개인 등이 상호 적정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등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민간이 보완적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 및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적 전통, 의식, 경제상황 등을 감안한 한국적 복지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건강한 가족제도, 지역사회의 상부상조정신 등 우리 사회의 장점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유인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실화를 통해 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